

‘盧측근 게이트’ 불거지나

검찰, 노건평씨 세종증권 비리 연루 의혹 수사
계좌 추적 착수…노씨측 “소환 맨 출두 하겠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5일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청탁이 실제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노씨가 금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 형제가 받은 30억여원의 상당 부분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내고, 향후 추적 과정에서 노씨에게 금품

이 건너간 정황 등이 드러나면 그를 즉각 소환해 사실 관계를 추궁할 방침이다.

노씨측도 검찰이 소환통보를 할 경우 검찰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홍 사장이 루비 대기로 쓴 80억원의 응처 추적을 계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치권으로 흘러간 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자 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수2과에 맡겼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정화심씨로부터 루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집을 비운 가운데 2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관광객과 취재진이 집 앞을 서성이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규제법안 폐기 ‘뜨거운 감자’

한나라 유정복 의원 개정안 제출…지방-수도권 논란 증폭시킬 듯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대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오는 2010년 이후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유

의 핵심법안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한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1년부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기되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아직 개정안에 대해 경과를 하지 않은 상태다.

개정안은 올해 국회에서 논의되기는 어렵고 이르면 내년 초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수도권 낙후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이미 제출됐지만 빠르면 다음 달에야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 예산 10% 절감 헛구호”

민주 조영태 의원, 경상비 증액 등 추궁



처가 통합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상경비는 2008년 문광부와 국정홍보처의 경상경비를 모두 합친 1천 981억원에 비해 약 43% 증가(849억원)한 2천 830억원에 달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2008년 두 부처의 경상경비를 합친 2천 861억원에 비해 527억원, 약 18% 증가한 3천 388억원의 경상경비가 책정됐다.

특히, 전체 경상경비 중에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인 특수활동비 역시 2008년 대비 8천 64억여원으로 2008년 두 부처의 경상경비를 합친 2천 861억원에 비해 527억원, 약 18% 증가한 3천 388억원의 경상경비가 책정됐다.

특히, 전체 경상경비 중에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인 특수활동비 역시 2008년 대비 8천 64억여원으로 2008년 두 부처의 경상경비를 합친 2천 861억원에 비해 527억원, 약 18% 증가한 3천 388억원의 경상경비가 책정됐다.

민주당 조영태 의원(사진)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상경비 예산안은 총 17조 4천여 억원으로 2008년 대비 8천 64억여원 증가해 5.3%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운영비 항목은 14조 2백 여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천 498억원이 증가해 6.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폐합 부처의 경상경비 예산 증액이 두드러져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가 사용하던 34억 7

천만원의 특수 활동비를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29억 3천 600만원, 지식경제부에 6억 4천 300만원씩 나눠서 증액 편성했다. 또 폐지된 과학기술부의 특수활동비 22억 5천 800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특수활동비로 승계되어 23억 5천 500만원으로 증액됐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해 국민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전 부처를 합해 3천 700여명 내외의 인력을 감축했음에도 경상경비 예산을 늘린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는 1% 특권층을 위한 감세정책과 대형 건설사업을 위한 SOC 예산 증액, 국민의 고통을 도외시한 경상경비 예산 증액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쌀 직불금 국조…여야 ‘책임론’ 공방

하고 방지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참여정부 때도 대통령에게 문제를 촉소 보고하고 인수위에도 부실 보고하는 등 과거 농림부의 행적에 의문이 많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쌀 소득 보전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작년에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왜 쌀 소득 보전법 개정안을 만들지 못하고 허송세월했느냐”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며 “개선안과 법률 개정안까지 마련해 놓고도 방치한 책임을 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조 특위는 이날 민주당 최규성 의원 등 4인이 서명 발의한 ‘쌀직불금 명단제출 협력 거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결의안과 고발의 건’을 각각 안건으로 상정하고 다음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24일 민주당 백원우 의원 측을 통해 국회가 여야 합의를 거쳐 참여정부 시절 쌀 직불금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위는 26일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건보공단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데 이어 내달 3~5일 청문회, 10일 종합 기관보고를 끝으로 12일 활동을 종료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0학년도 교사 임용시험대비 —

* 교과교육학 학습방법론 강의

*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논술 첨삭지도 실시

국내영교육학

교사임용, 진짜 승부는 교육학에서 결정된다!

국내영교육학에서 습득한 학습방법론이야말로

교사임용시험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겨울방학특강 사전예약접수중

개강 : 1월 2일(기본 이론 2개월완성)

똑똑한 강의 선택!
한 번 배워 평생가는
학습방법론 제시
직접 확인하십시오.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동파
국내영 선생 저자직강

교원임용 동영상강의 전문 - www.eduvieview.net

에듀뷰넷

▶교원임용 공개설명회 : 비전 임용시험제도 안내 및 효율적인 학습방법 상담

▶등록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 전화 주십시오.

교원임용고시 전문

교원임용고시 전문